

# 구청살림 쪼들려도 나몰라라 구의원들 “우린 해외로 간다”

광주 동·북구 17명 주민 혈세 3천여만원 들여 일본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 자치구의 의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겠다며 해외연수를 떠나 빙축을 사고 있다.

짧은 기간 외국을 방문하는 것이 규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과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연수 가 이뤄진데다 인터넷 등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구민 혈세를 들어 가 볼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의회 의원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다녀오는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의회 의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8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해외연수를 가면서 총 예산 1513만원을 전액 구

비로 책정했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박4일 간 일본 도쿄와 나리타 등의 재래시장과 노인복지시설·공연 유원지·인공 신도심 등을 둘러보고, 향후 동구 재개발사업의 발전방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회 의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9명도 2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해외연수를 가면서 총 예산 1710만원을 전액 구비로 사용했다. 일본 도쿄와 나리타, 요코하마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사와 노인복지시설, 보육원 등을 방문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자료를 발굴하는 한편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해외연수다.

하지만 이를 자치구는 공무원 인건

비마저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동구는 재정난으로 전체 부족예산이 178억원에 달하고, 내년예산으로 미뤄 편성한 68억을 제외해도 부족분은 110억에 달한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구는 신규공무원 전출로 인원조정을 하고, 충장로축제 예산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했으며, 평상시 전기요금 절감·사무실과 회장실 소모품 절약 등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구 또한 우산 수영장 건립비·재난 안전기금 등 81억원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며, 순수 인건비 부족액도 40억원에 이른다. 재정난으로 인해 매년 개최하던 5·18 정신계승 마

라톤 대회 사업도 취소했으며, 사업 예산과 경상경비에서 10% 가량 축소 운영해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 재정위기가 지역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구의원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해외 나들이에 나선 것은 너무한 일”이라며 “향후 해외 연수 보고서 작성 및 전문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매년 1회씩 의원 해외연수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수를 간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하지만 급여 예산만도 수십억원이 부족하고, 적자를 탈출할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의 권리만을 행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북구청은 지금 ‘국화세상’

27일 광주 북구청 앞마당에서 개막한 국화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하늘로 풍선을 날리며 행사를 기원하고 있다.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자리 창출 보조금 12억 ‘꿀꺽’

광주지검, 비영리단체 대표·간부 4명 구속·8명 기소

검찰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 거액의 국가의 보조금을 빼돌린 비영리단체 대표와 간부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7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7개 비영리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단체별로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2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가 대표를 맡은 모 사단법인은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3억5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촌 일손돕기 사업 등을 구실로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참여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이 돈을 나눠 가진 농장주와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되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에 지급된 액수는 179억원에 달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보조금 집행기 관인 광주고용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광주고용지원센터에 적발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일자리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수급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되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에 지급된 액수는 179억원에 달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보조금 집행기 관인 광주고용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광주고용지원센터에 적발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일자리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수급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은 취약

## 불륜 의심 살인

광주 주택가서 초등생·60대 여 숨진 채 발견

60대, 상대男 아들 치르고 아내와 자살 시도

광주시 남구 한 주택가에서 초등학생과 60대 여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밤 11시50분께 A(11·초교 5년)군이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 2층 자신의 집 거실에서 목과 얼굴 등을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아버지(54)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옆에서는 20cm 길이의 흉기가 함께 발견됐다.

A군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이날 오후 7시께 집에 아들을 남겨두고 잠시 외출한 뒤 돌아왔는데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밤 9시5분께에는 A군의 앞집에 사는 서교(60)씨와 서씨의 아내(61)가 자신의 집에서 극약을 마신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28)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끌어져

치료를 받았으나 서씨는 중태고, 서씨의 아내는 숨졌다. 서씨 옆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유서가 놓여져 있었다.

서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날 오후 7시쯤 전화를 걸어와 ‘내 재산을 정리하라’고 말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에 와보니 부모님 두분 모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에 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점과 서씨가 평소 아내의 불륜을 대상으로 여긴 이웃 남자의 아들을 해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서씨는 애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A군의 아버지가 집에 없어 대신 A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신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광주시·전남도 398억 미납

광주시와 전남도가 학교 신설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부담할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부 납부금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3년치(2008~2010년)만 17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 갚아야 할 부담금(224억원)까지 더하면 무려 398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이다.

시도 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땅값 절반을 받아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업체에 내는 방식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방세 안 낸다” 세입자 옷가지 가져가

○…밀린 월세를  
쌍대팔 주지않는다는 이  
유로 세입자들의  
옷가지를 모두 가져가버린 집주인이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설모(여·63)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광주시 동구 금동 자신의 M빌리에 세들어 사는 황모(26)씨 등 3명의 방에 들어가 양복과 점퍼, 신발 등 시가 130여만원에 해당하는 의류를 가져갔다.

○…경찰 조사결과 설씨는 황씨 등에게 한달치 방값 20만원을 달라고 수 차례 말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값만 준다면 다시 돌려주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대학편입마무리 실전트레이닝!

##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 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광주지검, 비영리단체 대표·간부 4명 구속·8명 기소

검찰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된 거액의 국가의 보조금을 빼돌린 비영리단체 대표와 간부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7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정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7개 비영리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단체별로 수천만~수억원씩 모두 12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가 대표를 맡은 모 사단법인은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3억5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촌 일손돕기 사업 등을 구실로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참여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고 이 돈을 나눠 가진 농장주와 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일자리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수급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은 취약